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국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로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간병·수발 수요가 급증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아동의 양육이나 가사 등의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돌봄(care)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가정의 역할에 의존해 왔으나, 점차 가정의 보호 기능이 쇠퇴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고 있고,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

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저소득층 위주의 보호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최근 경제구조의 유연화와 사회변동의 심화로 고용의 불안정, 실직·파산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한 사회적 부적응 및 소외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인간관계의 증가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안

정된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여성 및 중고령층의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 노인 수발 등의 가사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확대와 경제 활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선진화로 제조업 분야는 생산성의 증가에 불구하고 고용창출력이 계속 약화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 투자시 고용인원이 1980년 110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25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10명 미만 수준입니다. 반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블루 오션(blue ocean)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로 이행하는 시기에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03년 12.6%)이 선진국('03년 OECD 평균 2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발전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인적자본의 수준이 미래 국부 창출의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와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적자본의 개발·형성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적자본의 양극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

산성 저하는 물론 계층간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인적자본 형성 초기단계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한 출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사회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후적 현금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보장 중심의 국가보호 역할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보강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사회문제의 증가는 물론 향후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분야 39개 사업에 약 1조 3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약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모두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투입은 시장에서의 사회서비스 창출을 촉발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아동 양육, 장애인·노인 수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에 대한 투자는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잠재적 수요를 발현시키고 다양한 공급자의 진입을 늘림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약 15만명에 게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 및 산모에게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해 지역 사

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철저히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경필**